

## 발제문

## 역사적 대립의 해결을 위하여 -일본의 시점에서-

우메노 마사노부  
조에츠 교육대학

### 1. 문제의 소재와 학술적 방도

본 발표는 ① 한중일 간의 과거사와 역사 교육을 둘러싼 대립점에 관한 역사 교과서 기술이 일본 정부의 방침을 반영해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검정 교과서와 집필자인 역사 연구자의 노력으로 일정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①에는 주로 민간의 협동적 작업, 이에나가 교과서 소송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일본측의 역사적 경위가 있는 점, ③정부 관여에 의한 협동적 작업을 거치면서도 정치적 대립점에 대한 개선의 방향을 도출하지 못한 채, 각국의 역사 전시 등에서 일본의 판결에 기재된 사실 확인이나 학술적 기재 등을 활용해 해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역사 연구자, 역사 교육자의 역할로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일본인을 포함한 3국 국민에 의한 역사적 사실의 수용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의 의의를 지적하고자 한다.

### 2. 일본에서의 역사 교과서 현황

일본에서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특히 식민지 통치기에 관한 기술에 대해 개선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교과서, 정부 주장의 반영, 집단적 자위권이나 위안부 문제 고등학

교용 검정」(2016년 3월 19 일 아사히신문), 「교과서, 강력해지는 문부과학성 관여」(2017년 3월 25 일 아사히신문)은 2016년도 고교 역사 등의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2014년 1월에 개정된 검정 기준의 3대 요건(①정부 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초를 둔다, ②특정 일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 ③근현대사에서 통설적인 견해가 없는 수치 등의 기술은 여러 설이 있음을 함께 기재할 것)이 적용된다고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난징 대학살(난징 사건)의 희생자수가 ‘일본에서는 수만~수십만 이상 등 여러 설이 있음’ ‘중국 정부는 30만 이상을 주장’이라고 기재하더라도 ‘통설적인 견해가 없음’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일본사 A의 경우, ‘간동대지진 시에 학살된 조선인 수를 ‘수천명’이라고 기재했었으나 ‘통설이 없다’고 지적되어 ‘수백명~수천명’으로 바꾼’ 점, ‘중국인 강제 노역을 둘러싼 전후 보상 관련 기술에 ‘각국과의 조약으로 해결됨’이라고 추가한’ 점, 일본사 2권에 대하여 ‘위안부 문제 관련 2015년말의 한일 합의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검정 의견이 나온’ 점, 영토 관련 기술은 ‘현행의 1.6배 분량이 된’ 점 등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아래의 표 1과 표 2에서는 검정 교과서에서도 전후 보상문제 관련 기술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교과서의 전후 보상문제 관련 기술(2017년도에 사용중인 학교역사교과서) 1)

<b>도쿄 서적</b>	(본문) 일본은 식민지나 점령지에서도 혹독한 동원을 실시했습니다. 다수의 조선인이나 중국인이, 의사에 반하여 일본에 끌려와 광산이나 공장 등 열악한 조건 하에서 노역을 강요당했습니다. 이러한 동원은 여성에게도 및 전지에서 일하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p. 227)
<b>교육 출판</b>	(본문) 전쟁이 총력전이 되는 가운데, 일본 내뿐만 아니라 식민지나 점령지 사람들도 노동력의 병력으로 동원되게 되었습니다.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다수의 조선인이나 중국인이 일본의 광산이나 공장에 끌려와 낮은 임금으로 힘겨운 노역을 강요당했습니다. (p. 227)  (칼럼) 과거의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보상문제, 영토 문제 등으로 인해 대립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고려한 후,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고 무력에 의지하지 않고 대화와 법에 근거해 그 해결을 지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p. 259)

1) 야마모토 겐지(山元 研二) ·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戦後補償問題の授業開発に関する研究 - 判決書教材活用の視点から - 『上越教育大学研究紀要』 제37 권 제1호 표 1은 야마모토 겐지의 작성에 따름

<b>제국 서원</b>	<p>(본문) 전쟁으로 인해 일본 내 노동력이 부족하자, 일본은 기업 등에서 반 억지로 할당을 정해 조선인이나 중국인을 모아 일본 각지의 탄광·광산 등으로 데리고 가, 낮은 임금으로 힘겨운 노역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p. 227)</p> <p>(본문)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과거사 인식이나 영토를 둘러싼 문제도 있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p. 259)</p>
<b>이쿠호샤</b>	<p>(본문) 전쟁 말기는 조선이나 대만에도 징병이나 징용이 적용되어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광산이나 공장 등에 징용 되어 힘겨운 노역을 강요당하는 조선인이나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p. 238)</p>
<b>시미즈 서원</b>	<p>(본문) 억지로 데려 온 조선인·중국인이나 연합국군의 포로까지 탄광 등에서 일하게 했다. (p. 241)</p> <p>(본문) 아시아 근린국가들과는 관계가 심화되는 한편, 과거의 침략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 등을 둘러싸고 마찰이 생겼다. 그러한 가운데 1995년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평화 이념과 민주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총리 담화가 발표되었다. (p. 270)</p>
<b>마나비샤</b>	<p>(본문) 또한 일본군은 동남아시아 각지로부터 사람들을 노무자로 징집해 비행장 건설 등 강제로 육체 노역을 시켰습니다. 1942년, 태국에서 버마로 향하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버마로부터 10만명, 태국으로부터 4만명, 말레이반도와 자바섬으로부터 8만명 등 수많은 노무자를 열대 정글 지대의 건설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1여년의 돌관공사로 철도는 완성시켰지만, 중노역으로 인해 수많은 노무자가 과로나 병으로 쓰러져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사에서는 영국군 등 포로 6만명 또한 노역을 당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전후에도 ‘롬샤(Romusha)’라는 용어가 사용될 정도로 괴로운 육체 노역의 기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p. 239)</p> <p>(칼럼) 전쟁이 장기화되자 일본 정부는 패전까지 약 70만명의 조선인을 국내 탄광 등에 보냈다. 장시간의 중노역으로, 식사도 불충분했기 때문에 병이 들거나 도주하는 사람도 많았다. 또한 지원이나 징병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일본군에 동원되었다. 또 군속으로서 일본 점령지에 있는 포로 수용소의 감시인이나 토목 작업 등을 명할 수 있었다. 조선으로부터는 군인 20만명 이상, 군속 약 15만명, 대만으로부터는 군인 약 8만명, 군속이 약 12만명에 달했다. 한편, 조선·대만의 젊은 여성 중에는 전지에 보내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 여성들은 일본군과 함께 이동을 했는데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할 수 없었다. (p. 239)</p> <p>(본문)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권을 요구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중국인 전쟁 피해자와 유족이 개인으로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재판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중일공동성명 등을 근거로 소송은 거부되</p>

	<p>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007년 대법원이 판결에서 ‘피해자 등의 고통이 극히 크고, (중략)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이 기대된다.’고 부언한 점을 받아들여 화해를 추진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화해금을 지급했으며, 기념비를 지어 강제 연행·강제 노역의 사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대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p. 281)</p> <p>(주석) 고노 요헤이(河野 洋平) 관방장관 담화(자료)의 해설</p> <p>현재,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가리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p> <p>(칼럼) 1990년대, 세계에서는 전시 하 및 식민지 지배 하에서의 인권침해를 되묻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2001년에 남아프리카에서 개최된 유엔 주최 회의에서 노예 무역이나 노예 제도, 식민지 지배의 책임이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 넣은 것을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했다. 2013년, 영국 정부는 식민지였던 케냐에서 독립을 요구한 사람들을 수용소에 넣어 고문·학대한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할 것임을 표명했다. 1991년 한국에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전시 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1993년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나타내는 정부 견해를 발표했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도 전시 하의 인권침해를 되묻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미국·네덜란드 등 각국 의회도 이 문제를 채택했다. 현재, 세계 각지의 전시 하 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p. 281)</p>
--	---

표 2 교과서의 전후 보상문제 관련 기술(2017년도에 사용중인 학교역사교과서)<sup>2)</sup>

<b>신일본사 B 야마카와출판사</b>	(본문) 다수의 조선인이나 점령지역의 중국인을, 일본에 강제 연행해 광산 등에서 일하게 하고, 나아가 조선인 여성 등 중에는 종군위안부가 될 것을 강요받은 자도 있었다. (p. 325)
<b>현대 일본사 A 야마카와출판사</b>	(본문) 일본 식민지에서 만난 조선·대만 사람들이나 일본 점령 하에 있던 중국 사람들이 일본 본토로 연행되어 공장·광산 등에서 노역을 당했다. (p. 150)
<b>일본사 B 시미즈 서원</b>	(본문) 국내에서도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광산이나 토목 건축업에서는 다수의 조선인과 더불어 점령지역의 중국인까지 강제 연행해 흡사시켰다. (p. 228) (주) 패전까지 조선인은 약 80만명, 중국인은 약 4만명의 사람들이 일본에 연행되었다. 1945년 6월에 아키타현 하나오카 광산에서 강제 연행된 중국인 약 900

2) 야마모토 겐지(山元 研二) ·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戦後補償問題の授業開発に関する研究 - 判決書教材活用の視点から - 『上越教育大学研究紀要』 제37 권 제1호 표 2는 야마모토 겐지의 작성에 따름



	<p>명이 봉기해 420명이 학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p. 228)</p> <p>(칼럼) 노역자의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 조달도 이루어졌다. (p. 253)(자료) 무라야마 담화</p> <p>(본문)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 8월에는 ‘식민지 지배’ ‘침략’ 등 무라야마 담화 등의 문구를 포함한 전후 70년 ‘아베 담화’가 각의에서 결정되어, 12월에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이 설립하는 재단에 10억엔을 각출할 것임을 표명했다.</p>
<b>고교 일본사 B</b> <b>짓교출판</b>	<p>(본문) 경제면에서는 국가총동원법 등을 적용해 군수 생산을 실시하고, 국민징용령을 적용해 많은 사람들을 공장이나 탄광 등으로 강제 연행했다. (p. 213)</p> <p>(주)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1939년부터는 집단 모집을 통해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으로, 1944년부터는 국민징용령에 따라 약 80만명의 조선인을 일본 내지나 사할린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으로 강제 연행했다. 또 이 기간 중에 415만명의 조선인을 조선 내 광산이나 공장에, 11만명을 군대 내 노무요원으로 강제 연행했다. 또한 약 4만명의 중국인도 일본 등으로 강제 연행했다.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사망자를 내었고, 아키타현에서는 중국인의 봉기까지 일어나, 약 4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p. 213)</p> <p>(주) 싱가포르·말레이 각지의 화인(華人, 재외 중국인) 수만 명, 필리핀의 일반주민 약 9만명을 학살했다. 또 버마·태국·자바(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가혹한 노역 동원을 실시했다. (p. 213)</p> <p>(본문) 동남아시아에서는 군정 하에서 석유·고무·식량 등을 징발하고 군표 등을 남발했기 때문에 지독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었다. 게다가 노역자 징병이나 항일 운동에 참가한 주민 학살도 이루어졌다. (p. 213) (본문)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 움직임은 아시아 각국에 경계감을 주었다. 그 배경에는 전쟁 책임, 전후 보상문제의 미해결이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자 위안부나 강제 연행 등에 대해 일본에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분출되었다. 1991년, 한창 소해정을 파견할 무렵,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가이후 도시키(海部 俊樹) 총리는 침략에 대한 사죄를 표명했고, 1993년에는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 護熙) 총리가 처음으로 총리로서 ‘침략전쟁’이라고 명언했다. 전후 50년인 1995년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담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후 보상문제의 해결은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이 현지 주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예가 지적되었다. (p. 247)</p> <p>(주) 1993년 8월 5일 담화에서는 ‘감언, 강압에 의한 등 본인의 의지에 반해 소집된 사례가 많이 있고’ ‘위안소 생활은 강제적 상황 하’에 있었다고 말하였다. (p. 247)</p>

<p><b>일본사 B</b> <b>자료출판</b></p>	<p>(본문) 조선·대만·'만주국'에서도 황민화 정책과 전쟁 동원이 이루어졌다. (p. 316)</p> <p>(주) 1942년 2월 15일 싱가포르 점령 후, 일본군이 항일적으로 간주한 중국계 주민 수만 명을 싱가포르·말레이 각지에서 학살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아시아태평양 전쟁 하에서 일본 본토로 연행되어 강제 노역을 당한 중국인은 약 4만명이 넘으며 이 중 약 7,000명이 사망했다. 또, 1945년 6월 아키타현 하나오카 광산에서 후사를 견디지 못한 중국인 노역자가 봉기했으나, 잔혹하게 진압되었다. (하나오카 사건)(p. 317)</p> <p>(본문) 전후 보상문제의 미해결이나 복고적 내셔널리즘의 대두에 대한 위구심이 존재하고,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대립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93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 관여를 인정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다. (고노 관방장관 담화) 전후 50년에 해당하는 1995년, 국회에서 전후 50년 결의가 이루어지고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일본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전쟁과 관련해 침략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쟁 전체에 대해 침략전쟁의 성격을 부여하는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pp. 354-355)</p> <p>(본문) 일본이 아시아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위해서는 과거의 침략을 반성하고 위안부 문제나 강제 노역의 보상문제 등을 성실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력을 활용하면서 동아시아의 평화적 지역 공동체 형성에 대한 협력 등 아시아 국민들의 진정한 공존을 지향하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p. 358)</p>
<p><b>신일본사 A</b> <b>자료출판</b></p>	<p>(본문) 일본 정부는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약 80만명의 조선인을 일본 내지나 사할린의 군수 공장이나 탄광 등에 강제 연행했습니다. 또, 중국인도 강제 연행했습니다. (p. 104)</p> <p>(주) 조선에서는 1939년부터 집단 모집이 시작되어, 42년에 관 알선, 44년에는 국민징용령에 따라 수많은 조선인이 내지·사할린 등으로 연행되었습니다. 또 1942년의 도조(東條) 내각의 각의 결정을 통해 약 4만명의 중국인도 일본으로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은 탄광이나 광산, 댐 공사 현장 등에서 가혹한 노역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쟁 말기, 아키타현에서는 중국인 봉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하나오카 사건) (p. 105)</p> <p>(본문) 20 세기 후반에 전후 보상을 둘러싼 재판이 대량 제기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의 사건과 그로부터 발생한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식민지로부터의 강제 연행·강제 노역이나 '위안부'를 둘러싼 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p. 163)</p> <p>(칼럼) 사할린에는 조선에서 온 사람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패전 후 일본인은 본토로 돌아왔지만, 한국·조선인은 돌아오지 못한 채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p. 182)</p>

<p><b>신선 일본사 B</b> <b>도쿄 서적</b></p>	<p>(본문) 병력이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1943년에는 조선에서, 1945년에는 대만에서도 징병제가 실시되었다. 또한, 국민징용령에 따라 조선이나 대만으로부터, 나아가 중국의 점령지로부터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일본에 연행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본의 군수 공장이나 광산 등에서 가혹한 노역 여건 하에서 일하면서 참담한 생활 속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p. 228)</p> <p>(주) 징용령의 실시에 앞서 1942년 이래 집단적으로 끌려온 조선인은 약 70만명이라고 한다. 또,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진 식민지나 점령지 여성도 적지 않았다. (p. 225)</p> <p>(본문)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반세기 이상이 경과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시아태평양 전쟁 지역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전후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 정부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위안부·강제 연행·롭사·한국·조선인과 대만인의 전 일본병·인도네시아인 병보(兵補), 군포 등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 보상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각국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양국간 협정을 통해 해결이 완료되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개인에 대한 새로운 보상을 부정해 왔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 1995년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이 발족되어 보상 사업이 실시되었다. (2007년 해산) 한편, 정부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일본 정부에 의한 책임의 명확화와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p. 233)</p>
---	---

### 3. 역사적 사실로서의 기술에 있어서 민간의 협동적 연구가 수행한 역할

일본 검정 교과서 집필자의 상당수는 역사 연구자와 역사 교육자이며, 『한일역사 공통교재 한일교류의 역사(日韓歴史共通教材 日韓交流の歴史)』(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과서연구회 아카시 서점 2007년) 『미래를 여는 역사—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未来をひらく歴史—東アジア3国の近現代史—)』(한중일 3 국 공통 역사교재위원회 고분켄 2005년) 등을 필두로 한 역사 연구, 역사 교육에 있어서의 협동적 작업은 국민적 공유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교과서 기술에 대해서는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 중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전후 보상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온 일본의 역사 교육자·교사<sup>3)</sup>가 수행한 역할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3) 스즈키 도모코(鈴木 智子) (1997) 「『從軍慰安婦』問題を授業で扱って」 『歴史地理教育』 12월호 pp. 108-114, 가토 고메이(加藤 公明)(1999) 「リレー討論 從軍慰安婦を考える授業」 『教育』 49호 pp. 115-124, 다카하시 세이치로(高橋 正一郎) (2001) 「高校の授業 日本史 強制連行された中国人の訴え」 『歴史地理教育』 7

#### 4. 역사적 사실로서의 기술에 있어서 이에나가 교과서 소송이 수행한 역할

일본의 역사 교육사를 되돌아 볼 때, 이에나가 사부로(家永 三郎)가 위헌, 위법한 검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여 1965년의 1차 소송을 제기한 이래 32년에 걸쳐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해 온 교과서 소송, 특히 제3차 소송이 수행한 역할도 잊어서는 안 된다.

1997년 8월 29일,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은 ‘일본군의 잔학행위’ ‘난징대학살’ ‘소모 타이(草莽隊)’등의 기술에 대한 검정의 위법성과 더불어 ‘731 부대’의 검정 의견에도 재량권의 일탈을 인정했다<sup>4)</sup>.

1980년 검정, 1983년 검정에서 이에나가는 ‘일본군은 난징 점령 때, 다수의 중국군민을 살해했고, 일본군 장병 중에는 중국 부인을 욕보이거나 하는 자도 적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각주에 ‘일본군은 도처에서 주민을 살해하거나 촌락을 불태우고 부인들을 욕보이는 등 중국인의 생명·정조·재산 등에 대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첨가했는데, 검정은 ‘중국 부인을 욕보이고’ ‘부인을 욕보이고’ ‘정조’의 각 부분을 삭제한다는 수정 의견을 교부했다. 그러나 고등법원 판결은 ‘학계의 상황에 근거해 판단하면, 검정 당시에 연구자 사이에서는 난징 점령 시 일본군 장병이 중국인 여성에게 범한 정조 침해 행위에 대해 특히 비난을 받을 만큼 다수이고, 잔학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며, 다수의 중국 군민에 대한 살해 행위와 더불어 난징대학살로 불리며, 일본군의 난징 점령 시 발생한 특징적인 사건으로 파악하고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문부성의 검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나아가 대법원 1997년 8월 29일 판결은 관동군 안에 세균전의 실시를 목적으로 한 ‘731 부대’라는 군대가 존재해 생체 실험을 실시하면서 다수의 중국인 등을 살해했다는

월호 pp. 54-57, 쓰카모토 노보루(塚本 登) (2007) 「高校の授業 日本史 人道に反する罪に時効はない - 高校生は戦後補償裁判をどうみているか」 『歴史地理教育』 9월호 pp. 52-55, 히라이 미쓰코(平井 美津子) (2013) 「歴史教育の現場から: 「慰安婦」の授業を中心に」 歴史学研究会編 『歴史学研究』 No. 901 2013년 pp. 27-34

4) 도쿄 지방 재판소 1989년 10월 3일, 도쿄 고등 재판소 1993년 10월 20일

설은 이미 검정 당시 학계에서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정설화하고 있었다.’라며 검정 의견은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가 있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5. 일본의 전후 보상 재판에서 확인된 역사적 사실의 의의<sup>5)</sup>

1990년대 이후, 외국 국적의 원고가 일본 정부나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재판은 80건 가까이에 이른다. 전후 보상(배상) 청구 소송 중 원고의 호소를 용인(일부 용인)한 판결은 상급법원에서 삭제된 것을 포함하면, 아마구치 지방 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 1998.4.27, 도쿄 지방 재판소 2001.7.12, 교토 지방 재판소 2001.8.23, 나가사키 지방 재판소 2001.12.26, 후쿠오카 지방 재판소 2002.4.26등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국가무답책(國家無答責)의 법리, 시효나 민법724조 후단의 제척 기간, 조약 등에 의한 배상청구권 포기 등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사실 인정은 비록 재판의 승패로 결부되지 않더라도 사실을 앞에 두고 입법 조치나 화해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또 기업 측의 화해 대응, 정부 시책에 영향을 주어 왔다.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전후 보상문제 관련 재판에 기재된 사실 인정의 일부를 아래에 제시하고자 한다(원고명은 알파벳으로 나타내었다. 또 지면 관계상 내용은 요지만 실었다).

### 5.1 후쿠오카 고등 재판소 1999.10.1(나가사키 지방 재판소 1997.12.2) 한반도로부터의 강제 연행과 나가사키에서의 피폭

1942년 2월 13일,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안’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이에 근거해 다수의 조선인 노역자를 일본 내지로 이입시켰다. 1944년 8월에는 ‘반도인 노무자의 이입에 관한 건’(각의 결정)에서 국민징용령에 따른 일반 징용을 한반도에서도 발동시켰다. 판결은 국민징용령에 근거한 징용이라고 해서 도저히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일본기업에 의한 여관이나 차 안에서의 대응 또한 마찬가지로 ‘위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가의 관리인 순경이 연행을 하고 감시한 행

5)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戦後補償裁判に描かれたアジアの個人史」 『越境する歴史教育』 2004년 6월 교육자료출판회 pp. 45-71

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국가의 권력 작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A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1944년 12월 하순, 부산부장(일본 관리)이 발한 징용 영서가 송달되었으나 남겨질 가족이 걱정되어 숨어 있었다. 그러나 며칠 수, 순경(일본 관리)이 모친을 찾아가 징용 영서를 받았으면서도 도망친 경우에는 일체의 생활필수품이 배급되지 않는다고 위협하며 안내를 했다. A는 반항해봤자 얻어맞을 뿐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체념하고 순경을 따라 그대로 군용수송열차에 몸을 실었다. 부산 부두 가까이의 여관까지 연행되었지만 도망 방지를 위한 감시역이 있었다. 이튿날 아침, 관부 연락선에 올라 선실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상시 감시를 받으며, 시모노세키까지 연행되어 행선지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 기차로 나가사키까지 연행되었다. 기차 입구에는 감시역이 서있었고, 창 의 커튼은 모두 내려져 있었다. 나가사키 역에는 일본기업의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고, A등은 비로소 조선소에서 일하게 되었음을 들었고 직원의 감시 하에 기숙사까지 행진을 했다. 조선에서 온 징용공의 외출은 허가제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징용공 여덟 명 내지 열 명이 한 방에 넣어졌고 식사는 충분치 아니하였다. 징용공 중에는 영양 실조에 걸리거나 이질에 걸린 자도 있었다. 작업 중에 사망한 징용공이 있었던 외에 A자신도 바다에 빠졌다. 1945년 8월 9일, 하수구에 몸을 숨겼는데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얼마간 기절하였다. 이듬 날, A는 기차를 갈아타고 나가사키를 탈출해 8월 17일,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 5.2.1 도쿄 고등 재판소 2000.11. 30 종군위안부

판결은 병사에 대한 강제 매춘에 종사하게 한 구 일본군의 행위는 집단적, 조직적 강간이라고 하였으나, 사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국 국적의 여성에 대하여 만일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민법 724조 후단의 제척 기간에 따라 청구권은 소멸되었다 하여 기각하였다.

‘B는 한반도에서 태어난 여성이다. 1938년경, 업무 내용이 성과 관련되고, 심지어 추업(醜業)인 점 등을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지에서 일할 것을 승낙했고, 다수의 여

성과 함께 무창의 일본군 육군 위안소에 끌려갔다. 올면서 저항했으나 군의관에 의한 성병 검사를 받고, 뜻에 반하여 종군위안부로서 일본 군인의 성행위 상대를 하게 하였다. 그것이 싫어 도망하고자 하면 위안소의 초바(帳場) 담당자 등에게 다시 끌려와 맞거나 발로 차는 등 제재가 가해졌기 때문에 좋은 싫든 계속해서 군인을 상대할 수 밖에 없었다. 군인이 위안소에 오는 시간대는 병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사관이 저녁부터 오후 9시까지, 장교가 그 이후로 정해져 있어 매일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군인을 상대하여야 했다. 때로는 일요일은 오는 군인 수가 많았고, 통과 부대가 있을 때에는 다수의 군인이 방문해 그 상대가 수십 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군인 중에는 사소한 일로 격앙해 군도를 들이대거나 때리고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는 자도 있었다. B는 초바 담당자, 군인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맞다가 왼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옆구리에 군인이 비수를 들이대 칼자국이 남아 있다. 무창의 위안소에서는 왼팔에 문신을 당해 현재도 남아 있다. 군인은 피임 도구의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는 자도 있어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하는 위안부도 있었다. 제2차 대전 종료 시까지 위안부로서 어쩔 수 없이 군인을 상대로 추업에 종사할 수 밖에 없었다.’

### 5.2.2 히로시마 고등 재판소 2001.3. 29 종군위안부

‘C는 1940년 무렵, ‘일본의 공장에 돈 되는 일이 있다’ 등의 권유를 받아 부산에서 배를 이용해 대만의 위안소에 끌려가 거의 매일 일본인이나 대만인의 민간인 외에 수많은 일본 군인을 상대하다가 걸린 병 때문에 오른쪽 대퇴부에 수술자국이 남았고, 2, 3 차례 위안소를 이동하였다. 식사는 1일 2식으로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고 외출 또한 자유스러웠다. 전쟁 후 귀향하여 혼인을 하고 네 자녀를 두었으나 위안소에 대한 일은 근친자에게도 숨겼다. 현재는 폭력에 의한 후유증 때문에 귀도 잘 들리지 아니한다.’

### 5.3 히로시마 고등 재판소 2001.3. 29 여자정신대

‘D는 1944년 봄 무렵, 국민학교 담임 교사가 여학생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일본에 가면 좀 더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꽃꽂이도 할 수 있으니 가장 먼저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며 권유했고, 기업으로부터 파견된 일본인에 인솔되어 도야마 시에 도착하였다. 공장에서는 주린 배를 참으며 회전하는 금속봉을 절단해 비행기의 부품을 만드는 기계를 담당하였고, 1일 6000~8000개의 할당량이 끝나지 않을 때는 잔업도 하게 하여 작업 중에는 손가락에 상처를 입어 2회 수술을 하였다. 공습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불면증에 걸렸고, 정신 안정제를 먹고 쉬던 차에 1945년 7월 무렵 북한으로 끌려가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 종전이 되었다.’

#### 5.4 후쿠오카 지방 재판소 2002.5. 1 중국인 강제 노역

화북 정부위원회 및 각 행정장관은 노무 동원총부를 조직하여 노역자 강제 징수 계획을 세우고 화북노공협회와 일본군정당국이 협력하거나 혹은 무력으로 이를 지원하였다. 행정 공출의 실태는 강제 징수였다. 외무성 보고서는 사망 원인과 질병 원인에 대하여 총 사망자수 6830명 가운데 질병사는 6434명(92.4%), 상해사는 322명(4.7%), 그 외 자살자가 41명, 타살자가 33명이다. 그 중 배 안에서 사망하거나 병명을 알 수 없는 자는 583명, 일반 질병에 의한 자는 3889명, 전염병 또는 전염성 질환에 의한 자는 1962명이다. 상해사 중 공상사는 267명, 사상사는 55명이다. 공상자의 거의 대부분은 탄갱 및 발전소 건설 작업에 종사하였던 자로, 원인은 낙반 낙석, 측벽 붕괴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아 71명, 차량에 의한 경우가 30명, 가스 폭발은 20명이다. 사상사 55명 중 35명은 전재사이다.

#### 5.5 도쿄 지방 재판소 2002.8. 27 세균전

판결에는 ‘역사의 심판에 견딜 수 있는 상세한 사실의 확정은 최종적으로는 무제한의 자료에 근거한 역사학, 의학, 역학, 문화인류학 등의 관련 제과학에 의한 학문적 고찰과 논의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 내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당 법원으로서 본건의 각 증거를 검토하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구 일본군에 의한 중국 각지에서의 세균병기의 실전 사용은 제네바 의정서에서 말하는 ‘세균학적 전쟁 수단의 사용’에 해당된다. ‘세균전과 관련하여



여 헤이그 육전 조약 3조의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국가 책임이 발생하였다'고 결론지었다.

‘1936년에 편성된 관동군 방역부는 관동군 방역 급수부로 개편되었고 이윽고 731 부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동 부대는 1938년 무렵 이후 중국 동북부의 하얼빈 교외의 평팡(平房)에 광대한 시설을 건설하여 본부를 두고, 그 밖에 지부를 두고 있었다. 부대의 주된 목적은 세균병기의 연구, 개발, 제조로, 평팡 본부에서 이루어졌다. 또 중국 각지로부터 항일운동의 관계자 등이 731 부대로 이송되어 세균병기의 연구, 개발 과정에서 각종 인체실험을 실시하였다.’

‘1940년부터 1942년에 걸쳐 731 부대나 1644 부대 등에 의해 중국 각지에서 세균병기의 실전 사용(세균전)을 이루어졌다.’

‘1941년 11월 4일, 731 부대의 일본 군기가 창더(常德) 상공에 날아와 페스트 감염 벼룩과 먼, 곡물 등을 투하하였고 현성 중심부에 낙하하였다. 11월 11일에는 페스트 환자가 나오기 시작해 약 2개월 사이에 1차 유행으로 현성 지구에서 8명의 사망 환자가 나왔다. 약 70일의 간격을 두고 1942년 3월부터 2차 유행이 발생하여 6월까지 현성 지구에서 총 34명의 사망 환자가 나왔다. 창더 시가지의 페스트가 농촌부로 전파되면서 각지에서 다수의 희생자를 냈다. 창더 관련 페스트에 의한 사망자는 76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5.6 · 전후 보상 재판 판결의 의의와 역할

전후 보상 재판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조약에 의한 청구권 포기’를 근거로 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 사실 그 자체는 인정하는 판결도 나와 있다. 판결이 기업과의 화해를 촉구하고, 현실적으로 화해가 성립되는 케이스 또한 법원이 사실 인정을 한데 의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전후 보상 재판과 관련하여 미나미 노리오(南典夫)(2004)는 재판에서 밝혀진 피해와 가해의 사실, 권리행사를 둘러싼 사정 등의 ‘사실적 시행착오’가 일률적으로 청구를 물리치는 ‘제소의 적용 제한이 인정될지 여부가 분수

령이다<sup>6)</sup>고 지적한다.

역사적 사실로서 일본의 사법이 확인하고 공표한 사례가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6. 역사 박물관 등의 전시해설에서의 실증적 역사 기술의 확충(총괄)

전후 보상문제를 둘러싼 과제에 대해서는 교과서 문제를 비롯해 정치 주도로 화해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양국간 외무성이 대응한 한일 역사공동연구 보고서(제1차 2005년, 제2차 2010년)<sup>7)</sup>, 중일 역사공동연구 보고서(2010년)<sup>8)</sup> 등의 성과 또한 충분히 기여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본 발표의 마지막으로 3국의 많은 국민이 방문하는 박물관이나 기념관 전시, 관광용 자료 등에 대한 역사 전시의 해설, 특히 식민지화 프로세스, 종군 위안부 문제 등 전후 보상문제에 대한 개개 사항 해설에 대하여 자국민의 기존 지식, 이해를 전제로 한 상징적 전시에서 벗어나 역사 연구자, 역사 교육자에 의한 국외 방문자를 전제로 한 설명 기술로의 개선, 구체적으로는 3국의 역사 연구 현황, 사실 인정의 비교, 교과서 기술의 비교를 가미한 역사적, 학술적 해설을 중시하는 전시 해설로의 개선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하는 2008년에 전시 확인에 근거한 지적이며, ‘독립기념관 전시품 요록’(일본어판 2004년 개정판)에 기재된 문구를 토대로 한 지적이기도 하고, 독립기념관의 전시 담당자가 참가한 심포지엄(2010년 개최)에서 지적된 내용<sup>9)</sup>이므로, 이미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바, 그 경우에는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6) 미나미 노리오(南 典夫) 「戦後補償裁判の現在と未来を考える」 『法律時報』 일본평론사 2004년, p. 12

7) 일본 외무성 · <http://www.mofa.go.jp/mofaj/area/korea/rekishi/index.html>

8) 일본 외무성 · [http://www.mofa.go.jp/mofaj/area/china/rekishi\\_kk.html](http://www.mofa.go.jp/mofaj/area/china/rekishi_kk.html)

9)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日本の博物館における同時代展示の課題と可能性」 『博物館と記念館における歴史教育-ヨーロッパと東アジアの比較-』 한국국립박물관·도호쿠 아시아역사재단 2010년 8월 pp. 75-83 (2010년 08월 12일-13일 국제 심포지엄(서울국립박물관).

## 6.1 ‘을미 조약’ 관련 재현 모형

일본측 자료 등에 의한 일본측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교권 박탈이 군사적 압력 하에서 강요당한 사실은 하야시 곤스케(林 樵助) 『회상기(回想記)』, 니시요쓰쓰지 겐타카(西 四辻公堯) 『한국외교비화(韓國外交秘話)』, 『대한리년사(大韓李年史)』, 이토 히로부미(伊東博文)의 『복명서(復命書)』 (일본외교문서) 등에 의해, 예전에는 야마베 겐타로(山辺健太郎) 『일본의 한국 병합(日本の韓國併合)』 (태평 출판사 1966년), 근래에는 운노 후쿠주(海野福寿) 『한국 병합(韓國併合)』 (이와나미 신서 1995년) 등에 기술되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1) 일본 정부는 내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의 실행 계획을 결정(1905년 10월 27일)하고 한국 주재군 군사령관에게 명령, 일본군을 한성에 종결시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보호권 설정을 통지함으로써 열국에 사정 설명을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 (2) 한국 황제는 시종 외교권의 위양을 거부하였으나, (3) 이토히로부미가 한성에 입성(11월 9일)하여 보병 1대대·포병 중대·기병 연대가 왕궁 앞과 종로에서 군사훈련을 통한 시위를 하고, 일본병이 시내를 순회하는 가운데(11월17-18일) (4) 일본병으로 가득 찬 경운궁에 이토가 군사령관, 헌병 대장과 참내하여 황제가 최고회의를 거부하였기에 대신을 심문하였다. 이토는 각 대신의 비동의를 ‘반대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5) 오후 11시, 하야시 공사와 박 외상이 협약안에 기명, 외상이 직인을 날인하였다.

독립기념관의 재현 모형 전시는 역사적 자료에 근거한 역사적 장면의 재현인데,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한 해설은 생략되었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방문자들이 사실로써 납득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강제적 병합을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 6.2 ‘여자정신대’ ‘종군위안부’ 관련 재현 모형

여자정신대, 종군위안부 관련 재현 모형의 경우, 지역에서 트럭으로 납치하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납치 당사자와 피해자의 관계, 일본인과 한국인의 관

계는 한국국민과 식민지 통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관련 지식이 없는 자에게는 상징적 이미지를 얻는데 불과하다. 여기에서도 여자정신대, 종군위안부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의 전후 보상문제 관련 전시나 해설 등에 일본에서의 판결 사실 인정 부분(본 발표 5)이나 한국 및 일본의 교과서 기술(일본에 대해서는 본 발표 2)을 추가한 해설 전시가 검토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7. 사실 공유에 공헌

영화 ‘피의 일요일’(2002)은 1972년 1월 30일(일요일), 북아일랜드 텔리 시에서 발생한 가톨릭계 주민의 공민권, 억류(Internment)에 대한 항의 행동을 무력 탄압해 13명이 사망한 사건을 다룬 영화이다. 영국 정부는 자기 방위라고 설명하면서 북아일랜드 전체를 직접 통치 하에 두었다. 사건은 영국과 IRA의 처참한 살육과 항쟁을 거쳐 38년이 경과한 2010년 6월 15일, 카메론 총리가 정부의 입장에서 사죄를 했다. 원작자인 돈 마랑은 이 작품의 의도를 설명하면서 ‘사실이다’ ‘사실 해석이 아니다’ ‘결론은 아니다’ ‘화해 프로세스가 틀렸다<sup>10)</sup>’고 지적한다.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의 역할은 단기적 해결을 전망할 수 없을 때에도 역사적 사실의 공유에 대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장래 화해를 목표로 연구자, 교육자로서 역사적 사실의 확인을 반복하며 사회에 제공해 나가는데 있다. 이 작업을 끈질기게 이어나가고자 한다.

### 주요 저서 등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社会科歴史教科書成立史－占領期を中心に－』일본도서센터 2004년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裁判判決で学ぶ日本の人権』아카시 서점 2006년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映画で見なおす同時代史』시즈오카 학술출판 2017년

10) 돈 마랑의 말은 본 작품 DVD에 수록

## 발제문

## 歴史的対立の解決に向けて －日本の視点から－

梅野正信  
上越教育大学

### 1. 問題の所在と学術的方途

本報告は、①日本、中国、韓国の中の歴史と歴史教育をめぐる対立点に関わる歴史教科書記述は、日本政府の方針を反映して修正を求められたが、検定教科書と執筆者である歴史研究者の尽力により一定の記述が確認できること、②①には主に民間の協働的作業、家永教科書訴訟の経験と成果をふまえた日本側の歴史的経緯があること、③政府関与による協同的作業を経ても政治的な対立点は改善の方向を見いだせないでいるが、各国の歴史展示等において、日本の判決に記載された事実確認や、学術的記載等を活用して解説を改善していくことは、歴史研究者、歴史教育者の役割として期待されている。また、このことを通して、日本人を含む3国の国民による歴史的事実の受容プロセスを改善することの意義を指摘する。

### 2. 日本における歴史教科書の現状

日本における歴史教科書、近現代史、とりわけ植民地統治期に関する記述について、改善の兆しはみえない。「教科書、政府の主張反映 集団的自衛権や慰安婦問題 高校向け検定」(2016年03月19日朝日新聞)、「教科書、強まる文科省関与」(2017年3月25日朝日新聞)は、2016年度の高校歴史等の教科書検定に関して、2014年1月に改訂された検定基準の三要件(①政府見解がある場合はそれに基づく②特定の事柄を強調しすぎない③近現代史で通説的な見解がない数字などの記述では諸説あることを示す)が適用されと報じた記事によれば、南京大虐殺(南京事件)の犠牲者数で、「日

本では数万～十数万以上など諸説あり」「中国政府は 30 万以上を主張」と書いも、「通説的な見解がない」ことを明確にするよう求められたと報じている。また、日本史 A では、「関東大震災時に虐殺された朝鮮人の人数を「数千人」としていたが、「通説がない」と指摘され「数百人～数千人」に変えた」こと、「中国人の強制労働をめぐる戦後補償の記述に「各国との条約で解決済み」と追加した」こと、日本史 2 冊に対し、「慰安婦問題に関する 15 年末の日韓合意を書くよう求める検定意見がついた」こと、領土関連の記述は「現行の 1.6 倍の分量になった」ことなどが報じられた。

しかし下記表 1 表 2 からは、検定教科書においても、戦後補償問題関係記述が一定程度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表 1 教科書における戦後補償問題関係記述（2017 年度使用中学校歴史教科書）<sup>1</sup>

東京書籍	（本文）日本は、植民地や占領地でも、厳しい動員を行いました。多数の朝鮮人や中国人が、意思に反して日本に連れて来られ、鉱山や工場などで劣悪な条件下で労働を強いられました。こうした動員は女性にもおよび戦地で働かされた人もいました。（p. 227）
教育出版	（本文）戦争が総力戦となるなか、日本国内ばかりでなく、植民地や占領地の人々も、労働力の兵力として動員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労働力の不足を補うために多数の朝鮮人や中国人が日本の鉱山や工場に連れてこられ、低い賃金で厳しい労働を強いられました。（p. 227） （コラム）先の戦争や植民地支配をめぐる補償の問題、領土問題などで対立も生じています。日本の立場をふまえたうえで、相手の考えを尊重し、武力に頼らず対話と法に基づいてその解決をめざし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ています。（p. 259）
帝国書院	（本文）戦争によって日本国内の労働力が不足すると、日本は企業などで半ば強引に割り当てを決めて朝鮮人や中国人を集め、日本各地の炭鉱・鉱山などに連れて行き、低い賃金で厳しい労働に就かせました。（p. 227） （本文）日本は、東アジアの国々の間には、歴史認識や領土をめぐる問題もあり、関係改善に向けて努力が続けられています。（p. 259）
育鵬社	（本文）戦争の末期は、朝鮮や台湾にも徴兵や徴用が適用され、人々に苦しみを強いることになりました。日本の鉱山や工場などに徴用され、厳しい労働を強いられる朝鮮人や中国人もいました。（p. 238）
清水書院	（本文）むりやり連れてきた朝鮮人・中国人や連合軍の捕虜も炭鉱などで働かせた。（p. 241） （本文）アジアの近隣諸国とは、関係が深まる一方で、過去の侵略戦争や植民地支配への反省などをめぐって摩擦が生じた。こうした中、1995年に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を反省し平和の理念と民主主義を進めていくとした首相の談話が発表された。（p. 270）

<sup>1</sup> 山元研二・梅野正信「戦後補償問題の授業開発に関する研究—判決書教材活用の視点から—」『上越教育大学研究紀要』第 37 巻第 1 号 表 1 は山元研二の作成による。

<p>学び舎</p>	<p>(本文) また、日本軍は、東南アジア各地から人々を労務者として集め、飛行場建設などの肉体労働にかり立てました。1942年、タイからビルマに向かう鉄道を建設するため、ビルマから10万人、タイから4万人、マラヤとジャワ島から8万人など、多くの労務者を熱帯のジャングル地帯の建設現場に送り込みました。1年あまりの突貫工事で、鉄道は完成させましたが、重労働で多くの労務者が過労や病気で倒れ、多数の死者を出しました。この工事では、イギリス軍などの捕虜6万人も労働させられました。インドネシアでは、戦後も「ロームシャ」という言葉が語られ、苦しい肉体労働の記憶が残りました。(p. 239)</p> <p>(コラム) 戦争が長期化すると、日本政府は、敗戦までに約70万人の朝鮮人を国内の炭鉱などに送り込んだ。長時間の重労働で、食事も不十分だったため、病気になったり、逃亡したりする人も多かった。さらに、志願や徴兵で、多数の人々が日本軍に動員された。また、軍属として、日本の占領地にある捕虜収容所の監視人や土木作業などを命じられた。朝鮮からは軍人20万人以上、軍属約15万人、台湾からは軍人約8万人、軍属約12万人にのぼった。一方、朝鮮・台湾の若い女性の中には、戦地に送られた人たちがいた。この女性たちは、日本軍とともに移動させられ、自分の意思で行動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p. 239)</p> <p>(本文) 1990年代になると、人権を求める世界の流れのなかで、中国人の戦争被害者と遺族が、個人として、謝罪と補償を求めて裁判を起こしました。しかし、いずれの裁判でも、最終的には日中共同声明などを根拠として、訴えは退けられました。そのような中で、2007年に最高裁判所が判決に、「被害者らの苦痛はきわめて大きく、(中略)被害救済の努力が期待される。」と付言したことを受けとめて、和解をすすめた企業もあります。この企業は、被害者に謝罪して和解金を支払い、記念碑を建て、強制連行・強制労働の事実を後世に伝える取り組みを続けています。(p. 281)</p> <p>(註) 河野洋平官房長官談話(資料)の解説 現在、日本政府は「慰安婦」問題について「軍や官憲によるいわゆる強制連行を「直接示すような資料は発見されていない」との見解を表明している。</p> <p>(コラム) 1990年代、世界では、戦時下や植民地支配下での人権侵害を問い直す動きがすすんだ。2001年に南アフリカで開かれた、国連主催の会議で、奴隷貿易や奴隷制度、植民地支配の責任が初めて問われた。アメリカ政府とカナダ政府は、第二次世界大戦中に日系アメリカ人を強制収容所に入れたことを謝罪し、被害者に補償を行った。2013年、イギリス政府は、植民地だったケニアで独立を求めた人々を収容所に入れ、拷問・虐待した問題で、被害者に補償を行うことを表明した。1991年の韓国の金学順の証言をきっかけとして、日本政府は、戦時下の女性への暴力と人権侵害についての調査を行った。おして、1993年に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を示す政府見解を発表した。このように、東アジアでも戦時下の人権侵害を問い直す動きが進んだ。アメリカ・オランダなど各国の議会もこの問題を取り上げた。現在、世界各地の戦時下の暴力や人権侵害の責任が問い直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p. 281)</p>
------------	--

表 2 教科書における戦後補償問題関係記述 (2017 年度使用高校日本史教科書)<sup>2</sup>

新日本史B 山川出版社	(本文) 多数の朝鮮人や占領地域の中国人を、日本に強制連行して鉱山などで働かせ、さらに朝鮮人女性などの中には従軍慰安婦になることを強要されたものもいた。(p. 325)
現代の日本 史A 山川出版社	(本文) 日本の植民地であった朝鮮・台湾の人々や、日本の占領下にあった中国の人々が日本本土に連行されて工場・鉱山などで労働させられた。(p. 150)
日本史B 清水書院	(本文) 国内でも労働力不足の深刻な鉱山や土木建築業では多数の朝鮮人に加え、占領地域の中国人も強制連行し、酷使した。(p. 228) (註) 敗戦までに朝鮮人は約80万人、中国人は約4万人の人々が、日本に連行された。1945年6月に秋田県花岡鉱山で強制連行された中国人約900人が蜂起し、420人が虐殺される事件がおきた。(p. 228) (コラム) 労働者の強制動員や慰安婦の調達も行われた。(p. 253) (資料) 村山談話 (本文) 安倍晋三内閣 8月には、「植民地支配」「侵略」といった村山談話などの文言をもちこんだ戦後70年の「安倍談話」を閣議決定し、12月に日韓外相会談で慰安婦問題に関して、日本は政府の責任を認め、韓国が設立する財団に10億円を拠出することを表明した。
高校日本史 B 実教出版	(本文) 経済面では国家総動員法などを適用し、軍需生産を行い、国民徴用令を適用し、多くの人々を工場や炭鉱などへ強制的に連行した。(p. 213) (註) 労働力不足を補うため、1939年からは集団募集で42年からは官斡旋で44年からは国民徴用令によって、約80万人の朝鮮人を日本内地や樺太・アジア太平洋地域などに強制連行した。また、同期間に415万人の朝鮮人を朝鮮内の鉱山や工場に、11万人を軍隊内での労務要員に強制連行した。さらに、約4万人の中国人も日本などに強制連行した。さらに、約4万人の中国人も日本などに強制連行した。過酷な労働の中で、多くの死者を出し、秋田県では中国人の蜂起もおこり、約420人の死者を出した。(p. 213) (註) シンガポール・マレー各地の華人(在外中国人)を数万人、フィリピンの一般住民約9万人を虐殺した。また、ビルマ・タイ・ジャワ(インドネシア)などでは、過酷な労働動員を行った。(p. 213) (本文) 東南アジアでは、軍政のもとで石油・ゴム・食糧などを徴発し、軍票などを乱発したため、悪性のインフレーションが進んだ。さらに、労働者の徴発や抗日運動に参加した住民の虐殺も行った。(p. 213) (本文) 日本の軍事的役割の拡大の動きは、アジア各国に警戒感を与えた。その背景には、戦争責任、戦後補償問題の未解決がある。1990年代に入ると、慰安婦や強制連行などについて、日本に補償を求める動きが噴出した。1991年、掃海艇派遣の最中に東南アジア諸国を訪問した海部俊樹首相は、侵略への謝罪を表明し、1993年には細川護熙首相がはじめて首相として「侵略戦争」と明言した。戦後50年の1995年には村山富市首相が談話で植民

<sup>2</sup> 山元研二・梅野正信「戦後補償問題の授業開発に関する研究—判決書教材活用の視点から—」『上越教育大学研究紀要』第37巻第1号 表2は山元研二の作成による。



	<p>地支配と侵略への反省を表明した。しかし、戦後補償問題の解決は十分ではなかった。また、日本企業のアジアへの進出が現地住民の不信を招いている例が指摘された。(p. 247)</p> <p>(註) 1993年8月5日談話では、「甘言、強圧による等、本人の意志に反して集められた事例が数多くあり」「慰安所における生活は、強制的な状況の下」にあったと述べている。(p. 247)</p>
日本史B 実教出版	<p>(本文) 朝鮮・台湾・「満州国」でも皇民化政策と戦争への動員がなされた。(p. 316)</p> <p>(註) 1942年2月15日シンガポール占領後日本軍が抗日的とみなした中国系住民数万人をシンガポール・マレー各地で虐殺したのはその代表的な事例である。また、アジア・太平洋戦争下で日本本土に連行され、強制労働させられた中国人は約4万人を数え、うち約7,000人が死亡した。また、1945年6月秋田県花岡鉦山で酷使に耐えかねた中国人労働者が蜂起したが、残酷に鎮圧された。(花岡事件) (p. 317)</p> <p>(本文) 戦後補償問題の未解決や復古的ナショナリズムの台頭に対する危惧があり、歴史認識をめぐる対立も続いているからである。日本政府は、1993年に、慰安婦問題での日本軍関与を認め、元慰安婦の人々への「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した。(河野官房長官談話) 戦後50年目にあたる1995年に、国会で戦後50年決議がなされ、村山首相の談話が発表された。しかし、その後も日本政府は、アジア・太平洋戦争について侵略的事実を認めても、戦争全休を侵略戦争と性格づける態度を明確にしないまま現在にいたっている。(pp. 354-355)</p> <p>(本文) 日本がアジアにおいて「名誉ある地位を占める」ためには、過去の侵略を反省し慰安婦問題や強制労働の補償問題などを誠実に解決するとともに経済力をいかしつつ、東アジアの平和的地域共同体形成への協力など、アジア諸国民の真の共存をめざす一貫した努力が必要である。(p. 358)</p>
新日本史A 実教出版	<p>(本文) 日本政府は、労働力不足を補うため、約80万人の朝鮮人を日本内地や樺太の軍需工場や炭鉱などに強制連行しました。また、中国人も強制連行しました。(p. 104)</p> <p>(註) 朝鮮では、1939年から集団募集が始まり、42年に官斡旋、44年には国民徴用令によって多くの朝鮮人が内地・樺太などに連行されました。また、1942年の東条内閣の閣議決定により約4万の中国人も日本に強制連行されました。彼らは、炭鉱や鉦山、ダム工事現場などでの過酷な労働を強いられたため、多くの死者が出ました。戦争末期、秋田県では中国人の蜂起事件も起きました。(花岡事件) (p. 105)</p> <p>(本文) 20世紀の終わりに、戦後補償をめぐる裁判が多く起こされます。アジア・太平洋戦争時のできごととそこに発生する問題に対し、被害者たちが声をあげたのです。植民地からの強制連行・強制労働や「慰安婦」をめぐる訴訟がなされました。(p. 163)</p> <p>(コラム) サハリンには、朝鮮から来た人々も住んでいました。敗戦後、日本人は本土へ引き揚げましたが、韓国・朝鮮人は引き揚げることができず、そのまま住み続けざるをえませんでした。(p. 182)</p>

新選日本史 B 東京書籍	<p>(本文) 兵力や労働力の不足を補うため、1943年には朝鮮に、1945年には台湾にも徴兵制が実施された。また、国民徴用令によって朝鮮や台湾から、さらに中国の占領地からも、多くの人々が、労働力として日本に連行された。これらの人々は日本の軍需工場や鉱山などで過酷な労働条件のもとに働かされ、厳しい生活の中で多数の死者を出した。(p. 228)</p> <p>(註) 徴用令の実施に先立つ1942年以来、集団的に連れてこられた朝鮮人は約70万人といわれる。また、慰安婦として戦地に送られた植民地や占領地の女性も少なくなかった。(p. 225)</p> <p>(本文) 太平洋戦争が終わって半世紀以上を経た今日もなお、アジア・太平洋戦争地域から日本の戦争責任・戦後責任が問われている。日本政府に謝罪と補償が求められているのは、慰安婦・強制連行・ロームシャ・韓国・朝鮮人と台湾人の元日本兵・インドネシア人兵補、軍票などの問題である。これに対し、政府は国家補償については、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や各国と個別に結んでいた2国間協定で解決済みとの立場を一貫して主張し、個人への新たな補償を否定してきた。慰安婦問題では、1995年に「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アジア女性基金)」が発足し、償い事業が実施された。(2007年解散) その一方で、政府のこうした対応に対して日本政府の責任の明確化と補償を求める動きが各地で起こった。(p. 233)</p>
--------------------	---

### 3 歴史的事実としての記述に民間における協働的研究の果たした役割

日本の検定教科書執筆者の多くは歴史研究者と歴史教育者であり、『日韓歴史共通教材 日韓交流の歴史』(歴史教育研究会、歴史教科書研究会 明石書店 2007年)『未来をひらく歴史-東アジア 3 国の近現代史-』(日中韓 3 国共通歴史教材委員会 高文研 2005 年)等をはじめとする歴史研究、歴史教育における協働的作業は、国民的な共有にまでは至っていないとしても、少なくとも教科書記述については、一定の影響を与えるものとなっ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また、従軍慰安婦問題をはじめ戦後補償問題等に積極的に取り組んできた日本の歴史教育者・教師<sup>3</sup>の果たした役割も評価したい。

### 4 歴史的事実としての記述に家永教科書訴訟が果たした役割

日本の歴史教育史を振り返るとき、家永三郎が違憲、違法な検定で精神的苦痛を受けたとして、1965年の1次訴訟提訴以来、32年余りにわたり国に損害賠償を求めてた

<sup>3</sup> 鈴木智子(1997)「『従軍慰安婦』問題を授業で扱って」『歴史地理教育』12月号 pp.108-114、加藤公明(1999)「リレー討論 従軍慰安婦を考える授業」『教育』49号 pp.115-124、高橋正一郎(2001)「高校の授業 日本史 強制連行された中国人の訴え」『歴史地理教育』7月号 pp.54-57、塚本登(2007)「高校の授業 日本史 人道に反する罪に時効はないー高校生は戦後補償裁判をどうみているか」『歴史地理教育』9月号 pp.52-55、平井美津子(2013)「歴史教育の現場から:「慰安婦」の授業を中心に」歴史学研究会編『歴史学研究』No.901 2013年 pp.27-34

教科書訴訟、とりわけ第3次訴訟の果たした役割も忘れてはならない。

1997年8月29日、最高裁は、高裁判決は、「日本軍の残虐行為」「南京大虐殺」「草莽隊」等の記述に対する検定の違法性ととも、「731部隊」の検定意見にも裁量権の逸脱を認定した<sup>4</sup>。

1980年検定、1983年検定では、家永は、「日本軍は南京占領のさい、多数の中国軍民を殺害し、日本軍将兵のなかには中国婦人をはずかしめたりするものが少なくなかった。」と記述し、脚注に「日本軍はいたるところで住民を殺害したり、村落を焼きはらったり、婦人をはずかしめるものなど、中国人の生命・貞操・財産などにはかりしれないほど多大の損害をあたえた」と加えたが、検定は、「中国婦人をはずかしめ」「婦人をはずかしめ」「貞操」の各部分を削除する修正意見を付した。しかし高裁判決は「学界における状況に基づいて判断すると、検定当時における研究者間においては、南京占領に際して日本軍将兵が中国人女性に対して行った貞操侵害行為について、特に非難されるほど多数で、残虐であったとするのが支配的な見解であり、多数の中国軍民に対する殺害行為とともに南京大虐殺と呼ばれて日本軍の南京占領に際して生じた特徴的な事件としてとらえ論じられているのが一般的である。」として、文部省の検定は、「裁量権の範囲を逸脱した違法なものである」との判決を下した。

さらに最高裁 1997. 8. 29 は、関東軍の中に細菌戦を行うことを目的とした「731部隊」と称する軍隊が存在し、生体実験をして多数の中国人等を殺害したとの大筋は、既に検定当時の学界で否定するものはないほど定説化していた。」として、検定意見は「看過し難い過誤があり、裁量権の範囲を逸脱した違法がある」との判決を示した。

##### 5. 日本の戦後補償裁判で確認された歴史的事実の意義<sup>5</sup>

1990年代以降、外国籍の原告による日本政府や日本企業を訴訟対象とした裁判は80件近くに及ぶ。戦後補償（賠償）請求訴訟のうち原告の訴えを容認（一部容認）した判決は、上級審で取り消されたものを含めると、山口地裁下関支部 1998. 4. 27、東京地裁 2001. 7. 12、京都地裁 2001. 8. 23、長崎地裁 2001. 12. 26、福岡地裁 2002. 4. 26等にすぎない、他の多くは、国家無答責の法理、時効や民法七二四条後段の除斥期間、条約等による賠償請求権放棄等を理由に棄却されている。しかし事実認定は、たとえ裁判の勝敗に結びつかなくとも、事実を前にしての立法措置や和解の根拠とされている。また企業側の和解への対応、政府の施策に影響を与えてきた。このことを過小に評価すべきではない。

戦後補償問題関係の裁判に記載された事実認定の一部を下記に示しておきたい。

<sup>4</sup> 東京地裁 1989. 10. 3、東京高裁 1993. 10. 20

<sup>5</sup> 梅野正信「戦後補償裁判に描かれたアジアの個人史」『越境する歴史教育』2004年6月教育史料出版会 pp.45-71

(原告名はアルファベットで示している。また紙幅の関係で内容は要旨にとどめている)

#### 5.1 福岡高裁 1999. 10. 1(長崎地裁 1997. 12. 2) 朝鮮半島からの強制連行と長崎での爆

1942 年 2 月 13 日、日本政府は「朝鮮人労務者活用に関する方策」を閣議決定し、これに基づいて多数の朝鮮人労働者を日本内地に移入する。1944 年 8 月には、「半島人労務者ノ移入ニ関スル件」(閣議決定)が国民徴用令による一般徴用を朝鮮半島にも発動させた。判決は、国民徴用令に基づく徴用としても到底許容されるものではなく「違法である」と判じ、日本企業による旅館や車中での対応も同様に「違法」とした。また、国の官吏である巡査が連行し、監視した行為は「公権力の行使又は国家の権力作用に当たる」とした

「A は大韓民国に生まれた。1944 年 12 月下旬、釜山府長(日本国官吏)が発した徴用令書が届けられたが、残される家族のことが心配で潜んでいた。しかし数日後、巡査(日本国官吏)が母親のところへ行き、徴用令書を受け取りながら逃げた場合には一切の生活必需品が配給されないと脅して案内させた。A は、反抗しても叩かれるだけで効果がないものと思って観念して巡査に従い、そのまま軍用輸送列車に乗せられた。釜山埠頭近くの旅館まで連行されたが逃亡防止のための監視役がいた。翌朝、関釜連絡船に乗せられ、船室から外に出られないように常時監視されて下関まで連行され、行き先も教えられないまま汽車で長崎へ連行された。汽車の入口には監視役が立ち、窓のカーテンは全部おろされていた。長崎の駅には日本企業の職員が待っていて、A らは、初めて造船所で働くことを聞かされ、職員の監視の下に寮まで行進させられた。朝鮮からの徴用工の外出は許可制で、許されないこともあった上、一般に単独で外出することは許されなかった。徴用工八人ないし 10 人が 1 部屋に入れられ、食事は十分でなかった。徴用工の中には栄養失調になったり赤痢にかかったりする者もいた。作業中に死亡した徴用工がいたほか、A 自身も海に転落した。1945 年 8 月 9 日、下水溝に身を隠したところで原子爆弾の投下に遭い、しばらく気絶した。翌日、A は汽車を乗り継いで長崎を脱出し、8 月 17 日、下関から船に乗り釜山に帰り着いた。」

#### 5.2.1 東京高裁 2000. 11. 30 従軍慰安婦

判決は、兵士への強制売春に従事させた旧日本軍の行為は集团的、組織的強姦であるとしたが、謝罪と損害賠償を請求した韓国籍の女性に対して、仮に損害賠償請求権を取得したとしても民法 724 条後段の除斥期間により請求権は消滅したとして棄却した。

「B は、朝鮮半島で生まれた女性である。1938 年頃、仕事内容が性に関係し、まし

て醜業であることなど知らされていなかったため、戦地で働くことを承諾し、多数の女性とともに武昌の日本軍陸軍慰安所に連れて行かれた。泣いて抗ったが、軍医による性病検査を受けさせられ、意に沿わぬまま従軍慰安婦として日本軍人の性行為の相手をさせられた。いやになって逃げようとする、慰安所の帳場担当者らに連れ戻され、殴る蹴るなどの制裁を加えられたため、否応なく軍人の相手を続けざるを得なかった。軍人が慰安所に来る時間帯は、兵士が朝から夕方まで、下士官が夕方から午後9時まで、将校がそれ以降と決められており、連日のように朝から晩まで軍人の相手をさせられた。ことに日曜日はやってくる軍人の数が多く、通過部隊があるときは多数の軍人が訪れ、相手が数十人に達することもあった。軍人の中には、些細なことで激昂して軍刀を突きつけたり、殴る蹴るなどの暴行を加える者もあった。Bは、帳場の担当者、軍人らから繰り返し殴られるうちに、右耳が聞こえなくなった。脇腹に軍人から匕首で切り付けられた刀傷が残っている。武昌の慰安所では左腕に刺青をされて現在も残っている。軍人は避妊具の使用を義務づけられていたが、使用しない者もあって性病にかかり、妊娠する慰安婦もいた。第2次大戦の終了時まで慰安婦として軍人相手の醜業に就くことを余儀なくされた。」

#### 5.2.2 広島高裁 2001.3.29 従軍慰安婦

「Cは、1940年ころ、「日本の工場でお金になる仕事がある」などと誘われて、釜山から船で台湾の慰安所に連れて行かれ、ほとんど毎日日本人や台湾人の民間人のほか多くの日本軍人の相手をさせられ、かかった病気のため右大腿部に手術痕が残り、2、3回慰安所を移動した。食事は1日2食で十分に与えられず外出も不自由だった。終戦後に帰郷し、婚姻して4子をもうけたが、慰安所のことは近親者にも隠していた。現在は暴力による後遺症のため耳も聞こえにくい。」

#### 5.3 広島高裁 2001.3.29 女子挺身隊

「Dは、1944年春ころ、国民学校の担任教師から、女学生が工場で働いている写真を見せられ、「日本に行ったらもっと勉強ができるし、生け花もできるから、1番先に行くのが1番有利だ」と勧められて、企業から派遣された日本人に引率されて富山市に着いた。工場では、空腹に耐えながら回転する金属棒を切断して飛行機の部品を作る機械を担当し、1日6000～8000本のノルマが終わらないときは残業もさせられ、作業中に指にけがをして2回手術した。空襲の恐ろしさで不眠症になり、精神安定剤を飲んで休んでいたところ、1945年7月ころ北朝鮮へ移動させられ、自宅待機中に終戦となった。」

#### 5.4 福岡地裁 2002. 5. 1 中国人強制労働

華北政務委員会及び各行政長官は、労務動員総部を組織し、労働者強制徴収計画を立て、華北勞工協会と日本軍政当局が協力し、あるいは武力でこれを支援した。行政供出の実態は強制徴収であった。外務省報告書は、死亡原因と疾病原因について、総死亡者数 6830 人のうち、疾病死は 6434 人 (92.4%)、傷害死は 322 人 (4.7%)、その他自殺者が 41 人と他殺者が 33 人である。その内、船中で死亡し、病名不詳の者は 583 人、一般疾病による者は 3889 人、伝染病又は伝染性疾患による者は 1962 人である。傷害死のうち、公傷死は 267 人、私傷死は 55 人である。公傷者のほとんど全部は炭坑及び発電所の建設作業に従事していた者で、原因は落盤落石、側壁崩壊によるものが最も多く 71 名、車両によるものが 30 名、ガス爆発は 20 名である。私傷死 55 名中 35 名は戦災死である。

#### 5.5 東京地裁 2002. 8. 27 細菌戦

判決には「歴史の審判に耐え得る詳細な事実の確定は、最終的には、無制限の資料に基づく歴史学、医学、疫学、文化人類学等の関係諸科学による学問的な考察と議論に待つほかはない。しかし、そのような制約ないし問題があることを認識しつつ、当裁判所として本件の各証拠を検討すれば、少なくとも次のような事実は存在したと認定することができる」と述べて、「旧日本軍による中国各地における細菌兵器の実戦使用はジュネーブ・ガス議定書にいう「細菌学的戦争手段の使用」に当たる。「細菌戦に関しハーグ陸戦条約三条の規定を内容とする国際慣習法による国家責任が生じていた」と結論付けた。

「1936 年に編成された関東軍防疫部は、関東軍防疫給水部に改編され、やがて 731 部隊の名で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同部隊は、1938 年ころ以降中国東北部のハルビン郊外の平房に広大な施設を建設して本部を置き、他に支部を有していた。部隊の主たる目的は、細菌兵器の研究、開発、製造で、平房の本部で行われていた。また、中国各地から抗日運動の関係者等が 731 部隊に送り込まれ、細菌兵器の研究、開発の過程で各種の人体実験を行った。」

「1940 年から 1942 年にかけて、731 部隊や 1644 部隊等によって、中国各地に対し細菌兵器の実戦使用（細菌戦）が行われた。」

「1941 年 11 月 4 日、731 部隊の日本軍機が常德上空に飛来し、ペスト感染ノミと綿、穀物等を投下し、県城中心部に落下した。11 月 11 日にはペスト患者が出始め、約 2 か月間の一次流行で県城地区で 8 人の死亡患者が出た。約 70 日の間隔を置いて、1942 年 3 月から 2 次流行が起き、6 月までに県城地区で合計 34 人の死亡患者が出た。常德市街地のペストが農村部に伝播し、各地で多数の犠牲者を出した。常德関係のペストによる死亡者は 7643 人に上るとされている。」

### 5.6 戦後補償裁判判決の意義と役割

戦後補償裁判において、裁判の過程で、「条約による請求権放棄」を根拠に賠償を認めない場合も、被害事実そのものは認める判決も出てきている。判決が企業との和解を促し、現実には和解が成立することもまた、裁判所が事実認定を行っていることに依る部分が少なくない。戦後補償裁判にかかわる南典夫(2004)は、裁判で明らかにされていく被害と加害の事実、権利行使をめぐる事情などの「事実の積み重ね」が、一律に請求を退ける「除外の適用制限が認められるかどうかの分水嶺になっている」<sup>6</sup>と指摘する。

歴史的事実として日本の司法が確認し、公表された事例の活用が期待される。

### 6. 歴史博物館等の展示解説における実証的歴史記述の拡充（総括）

戦後補償問題をめぐる課題については、教科書問題をはじめ、政治主導で和解が期待できる状況にはない。2 国間の外務省が対応した日韓歴史共同研究報告書（第1次 2005 年、第2次 2010 年）<sup>7</sup>、日中歴史共同研究報告書(2010 年)<sup>8</sup>等の成果も十分に資するものとはならなかった。

このような現状をふまえ、本報告の最後に、3 国の多くの国民が訪れる博物館や記念館展示、観光用資料等における歴史展示の解説、とりわけ植民地化のプロセス、従軍慰安婦問題等、戦後補償問題の個々の事項解説について、自国民の既有知識、理解を前提とした象徴的展示から、歴史研究者、歴史教育者による、国外からの訪問者を前提とした説明記述への改善、具体的には、3 国の歴史研究の現状、事実認定の比較、教科書記述の比較を加えた歴史的、学術的解説を重視する展示解説への改善を提案する。

以下は、2008 年における展示確認に基づく指摘であり、『独立記念館展示品要録』（日本語版 2004 年改訂版）の記載をもとにした指摘であるし、独立記念館の展示担当者が参加されたシンポジウム（2010 年開催）で指摘した内容<sup>9</sup>であるので、既に変更が加えられている可能性があるが、その場合はご寛恕願いたい。

<sup>6</sup> 南典夫「戦後補償裁判の現在と未来を考える」『法律時報』日本評論社 2004 年、p.12

<sup>7</sup>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area/korea/rekishi/index.html>

<sup>8</sup>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area/china/rekishi\\_kk.html](http://www.mofa.go.jp/mofaj/area/china/rekishi_kk.html)

<sup>9</sup> 梅野正信「日本の博物館における同時代展示の課題と可能性」『博物館と記念館における歴史教育-ヨーロッパと東アジアの比較-』韓国国立博物館・東北アジア歴史財団 2010 年 8 月 pp.75-83 （2010 年 08 月 12 日-13 日国際シンポジウム(ソウル国立博物館)）。

### 6.1 「乙巳条約」関係再現模型

日本側資料等による日本側の研究では、韓国の外交権剥奪が軍事的圧力のもとで強要された事実は、林権助『回想記』、西四辻公堯『韓国外交秘話』、『大韓李年史』、伊東博文の「復命書」（日本外交文書）などにより、古くは山辺健太郎『日本の韓国併合』（太平出版社 1966 年）、近年では海野福寿『韓国併合』（岩波新書 1995 年）などに記述されてきた。具体的には以下の通りである。

(1) 日本政府は閣議で韓国に対する保護権確立の実行計画を決定（1905 年 10 月 27 日）し、韓国駐劄軍司令官へ命令、日本軍を漢城に終結させ、韓国政府の同意が得られずとも保護権設定を通告し、列国に事情説明を行うよう決定した。(2) 韓国皇帝は終始外交権の委譲を拒否したが、(3) 伊藤博文が漢城に入場（11 月 9 日）し、歩兵 1 大隊・砲兵中隊・騎兵連隊が王宮前や鐘路で演習による示威を行い、日本兵が市中を巡回した（11 月 17-18 日）中で、(4) 日本兵に満ちた慶運宮に、伊藤が、軍司令官、憲兵隊長と参内し、皇帝が御前会議を拒否したため、大臣を尋問した。伊藤は各大臣の不同意を「反対と見做すを得ず」と判断し、(5) 午後 11 時、林公使と朴外相が協約案に記名し、外相職印を捺印した。

独立記念館の再現模型の展示は、歴史的資料に基づく歴史的場面の再現であるが、根拠資料をもとにした解説は省略されている。日本をはじめとする諸外国の入館者が事実として納得するに足る資料を加えることで、強制的併合の理解をより容易にすることができよう。

### 6.2 「女子挺身隊」「従軍慰安婦」関係再現模型

女子挺身隊、従軍慰安婦関係の再現模型では、地域でトラックに拉致する様子が再現されている。ここに登場する拉致当事者と被害者の関係、日本人と韓国人との関係は、韓国民及び植民地統治の歴史を知る者は理解できるが、関係する知識が無いものにとっては象徴的イメージを得るにとどまる。ここでも、女子挺身隊、従軍慰安婦に限らず、日本の戦後補償問題関係の展示や解説等において、日本における判決の事実認定部分（本報告 5）や、韓国及び日本の教科書記述（日本については本報告 2）を加えた解説展示を検討されることを期待したい。

## 7 事実の共有に貢献する

映画「ブラディ・サンデー」（2002）は 1972 年 1 月 30 日（日曜日）、北アイルランドのデリー市で起きたカトリック系住民の公民権、インターンメント（Internment）への抗議行動を武力弾圧し、13 名が死亡した事件を取り上げた映画である。イギリス政府は自己防衛と説明し北アイルランド全体を直接統治下に置いた。事件は、イギリスと I R A のせい惨な殺戮と抗争の後、38 年を経て、2010 年 6 月 15 日、キャメロン



首相が政府として謝罪した。原作者のドン・マランは、この作品の意図を説明する中で、「事実だ」「事実の解釈ではない」「結論ではない」「和解のプロセスを間違えている」と述べている。<sup>10</sup>

歴史研究、歴史教育の役割は、短期的解決が見通せないときも、歴史的事実の共有に対する努力を放棄することなく、将来の和解を目指し、研究者、教育者として、歴史的事実の確認を繰り返し社会に提供していくことにある。この作業を粘り強く続けていきたい。

#### 主な著書等

梅野正信『社会科歴史教科書成立史－占領期を中心に－』日本図書センター2004

梅野正信『裁判判決で学ぶ日本の人権』明石書店 2006

梅野正信『映画で見なおす同時代史』静岡学術出版 2017

---

<sup>10</sup> ドン・マランの言葉は本作品 DVD に収録。